63. <연합시론> 롯데그룹 정조준 검찰 수사 `신속ㆍ정확'해야

(서울=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가습기 살균제 인명 피해 사건과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덧붙여 대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를 동원해, 대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와 각종 인허가 로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오전 전격적으로 단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 명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등 17곳을 동시에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의 자택은 물론이고 그룹 정책본부와 핵심 임원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물 분량만 1t 트럭 7~8대 분량에 달할 만큼 광범위한 자료확보가 이뤄졌고, 검찰은 곧바로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사용처에 관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 부당한 자금거래 규모가 최소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횡령과 배임의 규모가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계열사 간 금융거래 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까닭은 롯데 측이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첩보 때문이었다고 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측근이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이런 첩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는 했지만, 롯데 측이 이미 훼손한 증거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롯데그룹의 수난은 지난해 7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발이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폐쇄적 지배구조가 드러나면서 부정적 사회여론이 일어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만 했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측 주주 규합에 나선 상태라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이 와중에 롯데는 황금알을 낳는 면세점 신규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했고, 잠실점 사업권까지 박탈당했다. 올해 들어서는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사를 받게 됐고 납품 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정운호 사건의 불똥이 뛰어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신영자 이사장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히 비자금 조성 의혹은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그룹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점 때문이다. 숙원사업이던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 부산 롯데월드 부지 용도변경, 맥주 사업 진출 등을 둘러싼 의혹이 난무한다. 만약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이런 의혹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검찰이 진위를 분명하게 가려주길 기대한다. 다만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수사는 그야말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부정ㆍ불법을 눈감으라는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는 경계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봐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경우 수사는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확대재생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